

제10233호 2025년 5월 8일 목요일 음력 4월 11일

이재명 대선 가도 탄력... '사법리스크' 일단 해소

파기환송심, 대선 후 6월18일 연기
서울고법 “군등 선거운동 기회 보장”
민주 “국민 주권 원칙에 맞는 판단”
李 “헌법정신에 따른 합당한 결정”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 논란 여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 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대선 가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 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최대 난관으로 꼽혔던 '사법리스크' 고비를 일단 넘기면서 유력 주자로서의 위상도 한층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해석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차 공판기일을 당초 지정했던 오는 15일 오후 2시에서 대선 본투표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6·3 조기 대선 국면에서 막판 최대 변수로 꼽혔던 대선 전 파기 환송심 선고는 이뤄지지 않게 됐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이 후보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다음 공판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당초 이 사건 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이날 이 후보 측에서 기일변경 신청을 한 이후 재판부가 변경한 것이다.

민주당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정 선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중주편'에 나선 7일 전주시 풍남문 앞 광장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도중 한 지지자가 든 '공판 연기 환영,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라는 팻말에 사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정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웅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

락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적었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공판 연기와 관련, 이날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지금은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현재 받는 재판
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
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

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해석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대법원이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다면 헌법 84조에 명시된 규정을 적용
해 재판이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
이 나온다. ▶관련기사 3·4면

▶ 관련기사 3·4면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광주시, 간선급행버스 체계 본격 착수... 교통혼잡 해소
백운~매곡 8.67km 구간 계획 수립
내년 실시설계... 2027년 개통 목표

광주광역시와 '광주권 간선급행버스 체계(BRT)'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광주광역시 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BRT 개발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광역시시가 추진하는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인 BRT는 광주 남북축에 신축성·정시성 등을 갖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친환경 교통체계를 구축해 탄소중립 도시로의 전환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용역을 통해 ‘제1차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021~2030)’에 반영된 광주 백운광장(옛대동고)-농성역-광천사거리-경신여고-광주공고(8.67km)를 잇는 ‘백운-매곡BRT’ 노선의 개발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신규 노선 발굴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6년 기본·실시설계, 2027년 개통
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작수보고회에는 광주시, 시의회, 관할 자치구, 광주경찰,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연구원 등 교통전문가·관계자들이 참석해 광주권 BRT 구축 방향과 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김종호 광역교통과장은 “대자보 시대를 열어가고 시민의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광주시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사업인 만큼 관계기관과 전문가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자문과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정삼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OK! Now
Jeonnam

5월 전남 방문의 달

엄마 품 같이 포근한 전남으로 오세요

5월, 전남이 준비한 특별한 혜택

책 30% 할인혜택

숙박 30% 할인혜택

워케이션 30% 할인혜택!
(휴가지 원격근무)

**주요 관광지·체험상품
30% 할인!**

자세한 사항은 **전남 관광플랫폼 JN TOU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